

전북도 투표용지 부족·개표 누락... “개혁 앞의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필요... 감시 역할은 외부서”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능력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 고 있다.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각종 논란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마저 되묻는 실정이다. 전북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교육감 개표 결과 누락까지 연이어 겹치며 대대적인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교육감 개표 누락까지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전북 익산시 왕궁면 제3투표소도 포함돼 있다.

선거일 당일 오전 10시에 투표소에 있던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선관위 쪽에 전달하자 투표용지가 추가로 100매가 지급됐다. 다행히 투표 일시 정지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투표소에서는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투표결과가 제3투표소의 결과로 덧 씌워졌다. 이는 투표표 작성 과정에서 수기로 적어야 할 ‘제3투표소’ 부

정작 내부 검토 치중에 보고·후속조치 지연

명확한 해결법 모색할 규정이나 지침도 전무

분이 제1투표소로 오기재 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중화산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한 1104명의 교육감 투표 결과가 누락됐다. 정상 관리 대비 이날 오후 후보가 19표를 손해봤으며, 전북도선관위는 11일 위원회의를 열고 개표 결과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개표 누락 사태, 닷새 지나서 최종 보고... ‘늦장 지적’ 못 피해가

사태 발생 자체와 함께 문제가 된 점은 이후에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이를 대처하지 않고 인이하게 이 사인을 비리보며 ‘늦장 대응’을 해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언론 보도와 중앙선관위 발표 이후에서야 익산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함께 확인됐다. 이전 도 선관위 차원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개표 누락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선관위 측이 이를 인지한 것은 투표

다음날인 4일 새벽이었지만 도내 선거를 총괄하는 김상곤 전북선관위원장은 “개표 누락 사태가 지난 9일 오전에야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 측은 중앙과의 협의, 보고 체계, 정확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시간 지연 속 개표 누락 사태는 결국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

선관위가 개표 누락 발생을 인지한 4일부터 위원회의를 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11일까지는 일주일도 걸렸다. 이 시간동안 득표수 수정 후보자에 대한 사과 등의 후속 조치는 일절 없었다.

#데이터 수정 근거 없고, 업무 대부분은 사무원... ‘뺄 뺄’ 선관위 시스템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실한 선거 운영으로 그동안 선관위가 풀여왔던 고질병이 한 번에 세상 밖으로 나온 셈이 됐다. 전북의 개표 누락 사태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흥석 전북선관위 선거과장은 11일 개표 누락 사태 간담회에서 “(개표 결과 누락에 대해) 개표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경우의 수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나 예규, 매뉴얼은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선거통계시스템을 운영하니 공문을 보내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에 따르면 선거구 내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선거일 후 10일 내에 당선인 결정을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조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전북선관위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당선인 결정을 번복하지 않아도 되는 오류를 두고 선관위 내부의 규정도 없어 내부 검토에만 치중하다 사태가 알려지고 나서야 위원회의를 소집해 수정 사항을 의결한 것이다.

또 이번 개표 누락 사태에서도 완산구 개표장에 투입된 인원은 임시 채용된 선거사무원을 포함해 500여 명에 달하지만, 완산구선관위 직원은

9명에 불과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전북선관위는 누가 투표표 오기재를 벌였고 중복 보고를 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간담회 당시 “누가 투표표 오기재를 했고 중복 보고를 했는지 확인이 되느냐는 질문에서 과장은 “투입된 선거사무원은 직원이지 않고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모집되는 한다”며 “500~600명이 개표를 위해 모였고 그 현장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면 세심한 파악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더 이상 선관위 개혁 미룰 수 없어... 대수술 요구’ ‘뺄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선거 관련 논란을 두고 그동안 선관위에 쌓여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한 번에 틀어내 개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도내에서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및 휘하 단과대 학생회 관계자들은 10일 전북대학교 건자광장에서 시국선언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경조사, 특검 출법 등을 통한 엄정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선관위의 일관된 운영태도를 지적했다.

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1일 논평에서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과 대수술을 통해 투표용지가 표지자 국민이 받을 권리를 구르고 투표한 표지자 사라지는 사태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도 인이한 태도로 일관하는 선관위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영 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따라오는 자기 책임에 대한 완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감시인 감사도 못하는 구조”라며 “선관위 내부의 집합과 감사, 견제의 역할을 외부로 빼내야 실질적으로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무원 관해서도 국가사무를 관장하는데 필요한 사무원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교육도 반드시 필요한데, 단순히 학교에서 받아오는 ‘반장 선거’ 정도로 선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며 “사무원 업무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급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

도, 국방 첨단복합소재·부품 생태계 조성 490억 투입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선정

국가 수요 연구·인프라 구축

도내 중기·혁신기관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와 함께 2026년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최종 선정돼 미래 100년 먹거리로 꼽히는 방위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은 올 하반기부터 5년간 총 490억원(국비 245억원, 지방비 245억원)을 들여 탄소복합재 중심의 국방 첨단복합소재 분야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갖춘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유일의 소재·부품 공급망 거점으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전주권을 중심으로 소재를 개발하고 부품에 적용해 신뢰성을 평가한 뒤, 새만금에서 실증하는 지역 연계 구조가 특징이다. 전주권의 탄소섬유·내열소재 기업이 개발한 고강도 경량·내열 소재를 부품으로 검증하고, 드론·기동로봇·무인수상정 등 완성 제품은 새만금 실증테스트 베드에서 점검한다.

도는 탄소복합재를 기반으로 한 내열·경량·특수기능 소재를 방위사업에 적용하고, 지역 기업의 방산 진입을 돕는 윈스톱 지원체제와 거버넌스를 갖춰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완제품의 기획부터 설계, 연구개발, 시험·평가, 조달까지 전 주기를 묶는 통합 체계를 만들어 첨단 방위산업 공급기지로서의 위상도 다진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방 첨단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시험평가 플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이 지난 12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랫폼 구축 및 실증 지원 △방산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방산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방산 산수출 지원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최대 강점인 탄소 기반 첨단복합소재 산업과 새만금 실증 기반을 앞세워 사업의 당위성을 공각했고, 정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공모에 최종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전북의 주력인 탄소산업은 전방산업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선정으로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방위산업으로 확장하는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도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시장 진입과 기술 경쟁력 향

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주 국가산업단지 들어서는 ‘전북전주 방산혁신종합지원센터’를 거점 삼아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수요를 바탕으로 한 국방 첨단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플랫폼을 통해 지역 기업과 혁신기관의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방산 진출 토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방위산업과 기존 주력산업을 잇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탄소융합소재는 우주항공용 고온·국산 소재 분야에 수소연료전지와 이차전지는 무기체계 전동화를 위한 전원체계 분야에 적용해 미래 국방

수요에 대응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와 피지컬 AI 전략 P&C 사업 등과 손잡고 새만금에 모빌리티, 무인로봇, 유·무인 복합체계 같은 첨단 무기체계 실증 기반을 마련해 도내 방산 자원을 넓혀갈 방침이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은 전북이 미래 첨단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전북의 강점인 탄소소재와 첨단복합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방소멸 위기 극복·국가균형발전 도모

민주 윤준병 의원,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경북·고창,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지난 12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지방투자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투자촉진협의회를 설치해 지방투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

록 했다. 또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규·증설 투자를 할 경우 토지 매입비, 설비 투자비,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내 창업·이전 기업에는 세제 및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허가과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주거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해 지방 정착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여름철 재난 대비 ‘최우선’

전북자치도, 15~19일 도정 주요일정 발표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열고 15~19일 추진될 ‘전북도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을 기자들에게 소개하게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여름철 기후 대응과 도민 안전 확보,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과제들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기존 상승과 장마철을 앞두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15일부터 진안·무주를 시작으로 부안, 17일은 김제·정읍, 18일은 고창 등 도내 전역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8일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여름철 기후 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폭거노인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외 홍보 활동도 활발히 전개된다.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전북관광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여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전북의 매력을 알리고 기념품 판매 및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19일부터 21일까지는 경기도 고양에서 ‘도의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어 전북의 청정 수산물을 홍보하고 어업인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15일부터 풍수해보험 자부담 지원 모임을 시작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위해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17일에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도시군 합동 모의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미래 전략과 관련해서는 18일 200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상황’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9일에는 ‘올림픽의 날’을 기념하여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는 ‘스포츠헤이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도의회 “국가 미래 방산 중심지 도약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전북 전주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 선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12일 서난이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선정이 전북이 보유한 탄소 소재와 첨단복합소재 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래 첨단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국방 첨단소재와 부품 공급망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향후 5년간 총 49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를 통해 국방 첨단복합소재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될 예정이며, 전북이 국내 소재·부품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방산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